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2019. 12. 4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추진배경	1
II. 그간 핀테크 정책의 평가	2
III.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7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8
2.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	10
3.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12
4.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율체계 마련	15
5. 디지털 금융혁신기반 확충	18
6. 핀테크 투자 활성화	22
7. 해외진출 지원	25
8. 공공부문의 핀테크 지원 고도화	28
IV. 추진체계 및 향후일정	30

I . 추진배경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수용한 금융혁신과 신산업 창출·異種산업간 융합 등 혁신성장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 추진

* 핀테크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2018년 경제정책방향」)

- 법·제도·인프라·규제 개혁을 통해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금융산업에 원활하게 내재화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금융과 他산업간 결합 및 핀테크와 금융회사 사이의 경쟁적 협력관계(Coopetition) 형성 등 혁신의 광범위한 확산 유도
-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 오픈뱅킹, 규제개선, 핀테크 예산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역량을 다져나가는 단계
- 핀테크 분야의 아이디어가 ‘창업-성장-회수’로 이어지고 시장과 산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탄탄한 생태계 조성 중
- 다만, 핀테크가 우리 금융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자리잡기에는 부족
- 특히, 아직 국내에는 시장과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선도업체 출현이 미흡*하다는 평가

* '19.11월 기준, 국내 10개 유니콘 기업 중 핀테크 업체는 1개(CB Insights)

- 양적 성장과 더불어, 두터운 시장을 바탕으로 혁신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유기적이고 자생적인 생태계가 정착될 필요

◇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이 가능하도록 핀테크 시장과 산업의 Scale-up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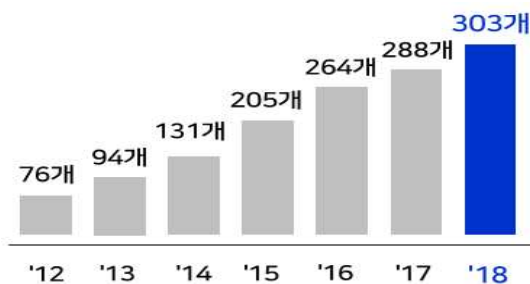
⇒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디지털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정부는 규제·인프라 혁신, 국제협력, 재정 등을 통해 뒷받침

II. 국내 핀테크 생태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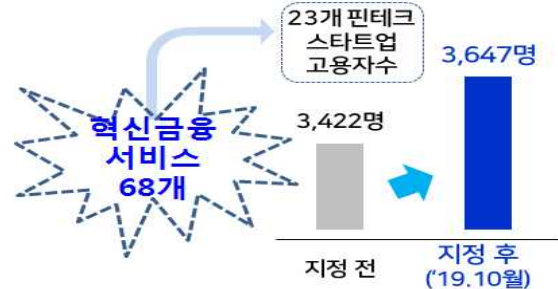
1 다양한 분야에서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

- 핀테크 산업의 확대와 함께 핀테크 업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고용도 증대

< 핀테크 업체 수 >



< 금융규제 샌드박스 본격화 >



- P2P·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소상공인·스타트업 등 자금조달이 확대되고, 결제인프라 혁신의 시발점인 오픈뱅킹도 출범

< P2P·클라우드 펀딩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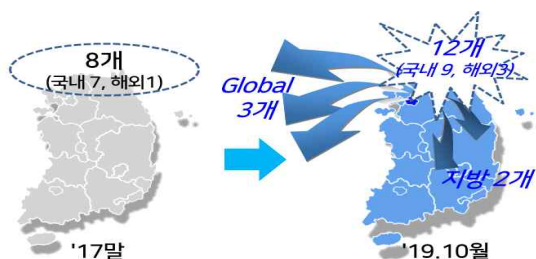


< 오픈뱅킹 실시(10.30~12.1) >



- 지방·해외 핀테크 랩 설치 등 민간중심 지원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면서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도 확산

< 핀테크 랩 확대 >



< 핀테크 도입지수(E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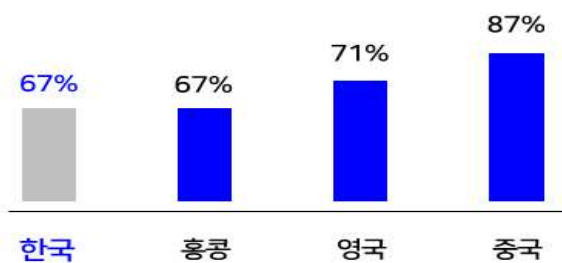


② 글로벌 수준의 시장과 산업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

□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준의 혁신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 금융 선진국은 오랜 산업화와 시장운영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산업 주도권 유지를 위한 혁신동력으로 핀테크를 활용
- 반면, 산업화 기간이 짧은 중국·동남아 신흥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핀테크 혁신 추진
- 이에 비해, 한국의 핀테크는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시작이 늦었고, 협소한 시장규모로 인해 확장성에도 한계

< 핀테크 도입지수(EY, '19) >



< 국가별 핀테크 중심도시 분포(Z/Yen, '19) >



□ 특히, 스케일업에 필수적인 유연한 규제·투자·해외진출 등 부족

- 오프라인 방식의 금융을 중심으로 설계된 금융규제체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
- 국내 핀테크 생태계에는 위험을 공유하고 스타트업의 도전을 인내하는 모험자본(patient capital)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
- 글로벌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도 저조

< 핀테크 투자(KPMG, '18) >



< 글로벌 100대 핀테크 기업 분포(KPMG, '19) >



3 핀테크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

- 그간 정책간담회 등 현장에서는 국내 핀테크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 제기
(☞ 참고2. 핀테크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 특히, 디지털 금융혁신의 가속화와 확장을 위해 시장과 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핵심과제가 중요하다는 평가
- 핀테크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정책역량의 집중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
- 다양한 규모·형태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필수적
 - 작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다 쉽게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극적 운영에 대한 수요 지속
 - 보다 큰 혁신을 위해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제약요인 해소 필요성도 부각
 - 핀테크 신산업의 끊임없는 출현과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노력도 중요
- 투자와 해외진출 측면에서도 국내에는 핀테크 기업의 본격적 성장에 필요한 도전을 인내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미성숙
 - 핀테크 스타트업·스케일업에 적시에 성장자금(growth capital)을 공급하는 인내자본 등 투자저변 확충이 시급
 - 핀테크 기업이 해외 틈새시장 및 신시장 개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요청도 증대
- 자생적 생태계가 안착하기까지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지원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참고1

그간 핀테크 정책 추진경과

- (핀테크 태동기: '13~'15년) 전세계적으로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정책지원 착수

※ 국내에서 **Fintech(Finance+Tech)**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기

-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이 출현하고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금융권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IT와 금융의 융합기반 형성 촉진

* 「IT·금융 융합 지원방안(15.1.27)」 주요내용: ❶ 사전규제→사후책임 강화 등 규제 패러다임 전환 ❷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❸ 전자금융업 등 핀테크 산업 육성

- (핀테크 형성기: '15~'17년) 새로운 플레이어 출현 등 금융산업 활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핀테크 활성화 여건을 마련

※ 클라우드펀딩, P2P,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출현**

-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15년), 클라우드펀딩 시행('16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17년) 등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 유도
-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15.3월) 및 데모데이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컨설팅·투자유치 등 사업안착 및 성장기반 제공

- (핀테크 확산기: '17~'19년) 보다 체계적인 핀테크 지원을 위한 조직·예산·제도 기틀을 마련, 핀테크 생태계 조성 노력 강화

※ 핀테크 분야 **최초로 유니콘 기업 출현**

-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지원의 구심점인 **금융혁신기획단**이 출범하고('18.7월), **최초로 핀테크 예산 편성**('19년 101억원)·집행
- 인터넷전문은행법·금융혁신법('18)·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9) 등 금융산업 경쟁·혁신을 위한 입법 및 혁신금융서비스 68건 지정
- **오픈뱅킹·MyData**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위한 신용정보법·전자금융법 등 개정노력도 병행

참고2

핀테크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9.18일)에서 핀테크 업계·금융회사로부터 핀테크 정책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 청취

① **(규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핀테크-금융회사간 협업 확대, 핀테크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환경 필요

-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만큼, 혁신금융사업자와 금융회사간 **협업기회 창출이**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 ▶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샌드박스과 연계된 **규제개선,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기업)
- ▶ “핀테크 규제개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정착된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핀테크 기업)
- ▶ “핀테크 업계 현황, 개선사항 및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가 아쉽습니다.” (핀테크 기업)

② **(투자·해외진출)** 상당수 핀테크 기업이 스케일업에 필요한 투자 유치·상장·해외진출에 애로 경험

- ▶ “최근 투자유치에 성공했는데 **안정적인 투자재원과 투자자의 관심**이 있다면 핀테크 산업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기업)
- ▶ “저희 뿐만 아니라 많은 핀테크 기업이 자본시장 투자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핀테크 특성을 반영한 상장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
- ▶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진출하는 경우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지원**해 준다면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진출 추진 기업)

③ **(신산업)**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법·인프라 수요도 제기

- ▶ “신정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법개정을 위한 입법 노력**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분야 핀테크 기업)
- ▶ “연내 오픈뱅킹 시행에 맞춰 은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은행)
- ▶ “금융플랫폼 등 핀테크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규제체계와 전자금융법의 현대화**도 시급합니다.” (금융플랫폼 핀테크 기업)

Ⅲ.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기 본 방 향

- ◇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
 →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
 ⇨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

1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및 보완

- ① '20.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
- ② 내실있는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
- ③ 혁신금융사업자 사후지원 · 감독방안 마련

2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을 위한
동태적·맞춤형·현장밀착형 규제혁신

- ① 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혁신
- ② 글로벌 서비스 도입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 ③ 현장과 함께하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3

핀테크 특화 진입규제 도입 및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 ①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적용
- ② 핀테크 특화 임시허가 도입
- ③ 개별 금융업법 특화 인·허가 신설

4

디지털 기술혁신·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디지털금융 규율체계 마련

- ① 디지털금융 규율체계 선진화
- ② 디지털금융기술을 수용한 규제체계 마련
- ③ 디지털기술을 통한 규제준수 · 감독 효율화

5

금융권과 핀테크 모두가 참여하는
디지털 금융혁신기반 확충

- ① 금융결제 인프라혁신 차질없이 추진
- ②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법·인프라·제도 정비
- ③ 핀테크에 기반한 신서비스 활성화

6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심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

- ①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투자기반 확충
- ② 핀테크 혁신펀드 등 투자재원 확대
- ③ 핀테크 활성화 위한 코스닥 상장제도 보완

7

민간-공공부문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① '금융회사-핀테크-정부'간 협업
- ② 신남방정책 연계 핀테크 분야 금융협력
- ③ 공공부문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8

예산 · 핀테크지원센터 · 세제 등
공공부문의 핀테크 지원 고도화

- ① '20년 예산사업 확대
- ② 핀테크 지원센터 사업역량 강화
- ③ 핀테크 친화적 세제체계 도입

◇ 그간 규제 샌드박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제도시행 1년간 혁신 금융서비스 100건 지정 등 보다 적극적이면서 내실있게 운영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혁신법 시행 7개월간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핀테크 혁신동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 7개월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심사 및 사후관리 관련 핀테크 업계·시장의 애로, 제도개선 사항 제기
 - 혁신금융사업자의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하며 부가조건과 금융 법령 준수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의견이 다수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에 관한 현장의견(9.18일 현장간담회)

- ① "어렵게 출시한 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배타적 운영권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② "핀테크 기업이 다양한 금융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나, 감독규제는 아직도 기존 산업의 관점에서 핀테크를 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③ "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부분은 정확히 완화하고 새롭게 제도화할 부분은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추진과제

① '20.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 등 과감한 운영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동안('19.4월~'20.3월)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샌드박스 심사 진행
 - * ('19.4월~11월) : 68건 지정 / ('19.12월~'20.3월) : 30건 이상 심사·지정 목표
- 신청 핀테크 기업에 밀착컨설팅을 제공하고 '20.3월 이후에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정기 개최(분기별 2회 이상) 등 적극운영

② **내실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제도보완

□ 그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내실화 추진

① **[아이디어 보호]** 혁신금융사업자가 특허출원 등을 통해 아이디어·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특허청 협업* 등 추진

* [특허출원 지원] 규제특례 관련 기술은 우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13개월→2개월)
[특허분쟁 조기해소] 혁신금융사업자 특허 침해시 신속심판 지원(약7.2개월→3개월)

② **[부가조건]**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 최소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하고, 부가조건 변경요청 제도도 적극 운영

③ **[M&A]** 혁신금융사업자의 M&A시 신속하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성공사례 창출 유도

* [금융혁신법 제22조] 금융위 변경결정에 따라 존속사업자로 서비스 지정효력 이전

③ 핀테크 기업의 연착륙을 위한 **사후지원·감독방안** 마련

□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핀테크 예산('19년 101억원)을 활용하여 테스트·보안점검·공간 제공 등 원활한 사업화 뒷받침

○ 1:1 전담멘토를 지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출시 - 서비스 운영'의 쏘 과정에서 컨설팅·애로해소 등 밀착지원

※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해당 혁신금융사업자가 실패경험을 발판으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제공

□ 혁신금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 마련

○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범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적용*

*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에 대한 면책근거 마련(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 '20.上)

◇ 근본적인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①동태적·②맞춤형·③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체계를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아날로그 규제의 디지털 규제 전환노력 지속이 중요
 - 혁신금융서비스가 한 번의 실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 규제개선까지 완료될 필요
 - 글로벌 서비스를 수용하기 어렵게 하는 규제가 국내 핀테크 업계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기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대한 요청도 지속

나. 추진과제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혁신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궁극적으로 규제개선까지 연결되도록 운영
 - 테스트 종료 전에도 샌드박스 테스트 과정에서 서비스 효용성·편의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규제* 정비 추진

* 예)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19.10월 既개선), SMS 출금동의, 대출 모집인 1사 전속규제, 소수단위 주식 매매중개 등 6개 우선과제는 '20년까지 신속 개선

- 제도운영과 연계한 개선과제 발굴·이행점검(분기 1회)과 혁신 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제안하는 법령정비 요청제도* 병행

* 해당 기업이 서비스 출시 이후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규제당국에 규제정비 요청(법령정비 요청서식 마련)

②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도입을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관점에서 성공요인·성장경로 등을 분석, 규제개선 추진
 - 해외에서는 자유로운 진입환경, 유연한 금융규제 등으로 핀테크 유니콘 출현 활발('19.11월 글로벌 유니콘 418개중 52개가 핀테크 기업)
 - 국내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 발굴 → 필요시 법령개정

<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모델 >

분야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해외 기업
지급결제 /플랫폼	지급결제 협력모델	▶ 他핀테크 기업에게 지급서비스의 아웃소싱(white-label solution) 제공	(英)Wirecard & Pockit
자산관리	결제·투자 융합	▶ 구매대금 결제시, 일정금액 미만 잔액이 자동으로 투자계좌에 적립(Round-up)	(美)Acorns
보험	P2P보험	▶ 지인끼리 보험에 가입하고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 보험서비스	(獨)Friend-surance
대출/ 데이터	소상공인· 중기 대출	▶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자료 작성	(美)Kabbage

③ 현장과 함께 하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핀테크 트렌드를 감안하여 금융혁신 현장을 지속 방문하여 상시적 규제정비 추진
 - '19.6월 발표(「민관합동 규제개혁 T/F 결과」)한 150건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상황을 지속점검하여 조속한 이행완료 추진
 - * 예) '19.10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시행
 - 핀테크 랩, 핀테크 기업 릴레이 방문 등 현장소통을 통해 업계의 규제건의·애로를 수렴하여 개선과제* 지속 발굴
 - * 다수부처 관련사항 등 사안에 따라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국조실)과 연계

- ◇ 다양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입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진입장벽 완화
- ⇒ 혁신금융사업자 대상의 ①특례기간 연장, ②임시허가와 개별 금융업권별 ③업무단위 신설·세분화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규제 샌드박스 기업의 테스트와 연계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단계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융업 진입경로 마련 필요성 제기
 - 혁신금융사업자가 성공적인 테스트 종료 후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으로 성장절벽에 직면할 우려 존재
 - 또한 규제개선에 필요한 입법불비 등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중단 및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한 제도보완 수요 발생
-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금융산업이 다양한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

* (예) 현행 자본금(50~300억원)을 완화한 소액 단기보험회사 도입 추진 중(보험업법)

나. 추진과제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적용(금융혁신법 개정)

- 테스트기간 종료 시까지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특례기간 연장

① [적용대상] 혁신금융심사위·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성과 및 연장 타당성 등을 인정받은 혁신금융사업자*

*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모두 포함

② [적용사유] 테스트 종료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③ **[적용방식]** 혁신금융심사위에서 연장 필요성에 대해 주기적(예: 2년)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사업자 지위 갱신
- ④ **[적용기간]** 혁신금융심사위의 연장 필요성 인정을 전제로, 해당 금융업 법령 개정시까지 적용

※ 관련 샌드박스 사례

- ①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수점 단위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 자본시장법령의 구분예탁(금융투자회사 소유분, 투자자 소유분) 및 해외 시장거래 중개시 계좌구분 개설(자기계산, 고객계산) 의무 특례 부여
→ 자본시장법령 예탁제도 등 정비 필요
- ② SMS 출금동의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출금동의 방식을 서면, 전자서명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샌드박스를 통해 출금동의 방식을 추가 허용하는 특례 부여
→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 필요
- ⇒ 혁신금융사업자의 테스트 종료시까지 특례적용 규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례기간 연장 적용

②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 도입(스몰 라이선스, 금융혁신법 개정)

□ 테스트기간 종료 시까지 진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업무·규모 등을 감안한 인·허가 부여

- ① **[적용대상]** 혁신금융심사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 및 연장타당성 등을 인정받은 혁신금융사업자(금융회사는 원칙 제외)
- ② **[적용사유]** 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의 계속제공을 위해 인·허가가 필요하나, ④인가단위가 없거나 ⑤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 ③ **[적용방식]**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④업무영위를 인정 또는 ⑥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부여(진입요건 완화)
- 혁신금융심사위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임시허가를 결정하고 부가조건을 통해 영업행위·건전성 등 기타규제* 적용

* 관련 금융업법 규제를 적용하되, 서비스 범위·규모·방식 등을 감안, 규제수준 결정

④ [적용기간] 혁신금융심사위의 연장 필요성 인정을 전제로, 해당 금융업 법령 개정시까지 적용

※ 관련 샌드박스 사례

① 비재무정보 활용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신용평가모형 개발 등 서비스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등'을 신용조회업무로 정의하고, 허가 대상을 금융회사 출자법인 등으로 제한 → 진입규제 특례를 적용

⇒ (임시 업무허용) 금융회사 출자법인 외의 기업에 대해서도 업무범위를 '기업 신용조회' 서비스 등으로 한정한 신용조회업무를 허용

② 개인간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서비스

-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규정 → 금융투자업 인가 특례적용

⇒ (진입요건 완화) 자본금 요건 등이 완화된 금융투자업 인가단위를 적용하되, 업무범위를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로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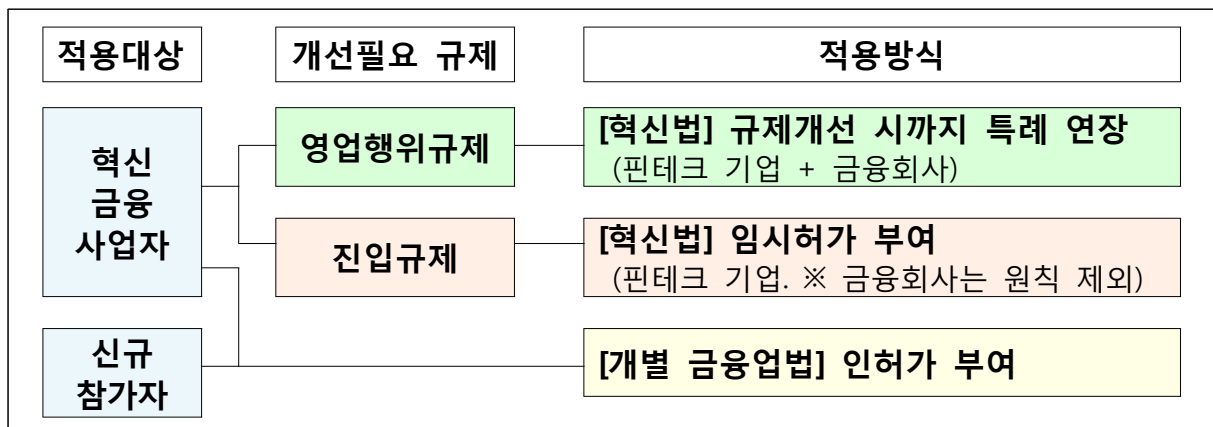
③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허가(등록) 신설 및 세분화

□ 규제 샌드박스과 연계한 임시허가의 안정적 운영·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개별 금융업 인·허가단위로 반영 추진

□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 및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도평가 등을 통한 금융업 인·허가 단위 세분화* 노력 병행

* [기존 사례]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분기별 거래금액 30억원 이하) 자본금 : 일반 5억원 → 3억원

< 스몰 라이선스 제도적용 프로세스(안) >



4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율체계 마련

- ◇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에 필요한 규율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

가. 필요성

- 최근 핀테크 발전 및 전자금융산업 성장에 따라 '06년 제정 이후 큰 틀의 변화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수요 부각
 - 금융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른 혁신을 빠르게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규율체계 현대화가 시급
 - * EU는 역내 지급결제 혁신, 핀테크 기업의 성장 등을 반영하여 지급결제산업 지침(PSD : Payment Services Directive) 개정('05년 PSD → '15년 PSD2)
- 전자금융거래규제 현대화를 통한 혁신동력 확보·지속 측면에서 금융보안, 이용자 보호 등 금융안정을 위한 규제체계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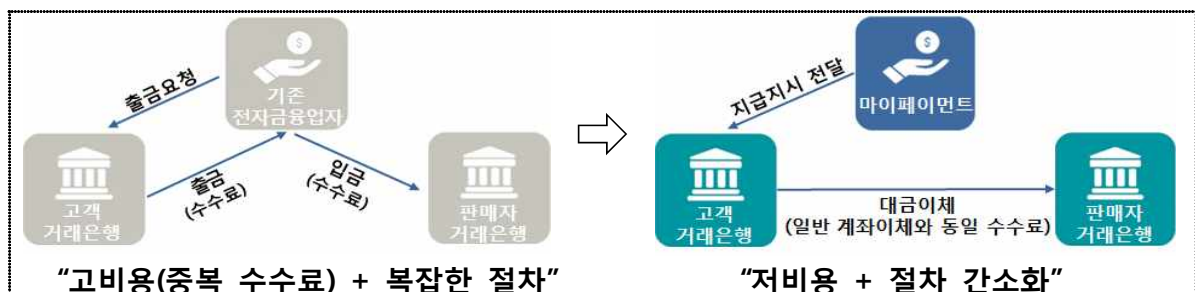
나. 추진과제

① 디지털금융 규율체계 선진화를 통한 혁신과 안정의 균형 도모

지급결제 및 금융인증 산업 활성화 여건 마련

- (지급결제) 신산업 도입 및 기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
 - 고객자금 보유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지시(Payment Order)하는 'My Payment' 도입 ⇨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 진입 촉진

<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도입 기대효과 >



- 디지털금융 이용자 편익증진(가전·항공권 등 고가상품 구매) 등을 위해 간편결제 관련 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 주요 규제개선 과제

- ① (충전한도 등 확대) 간편결제수단의 선불 충전·이용한도를 확대(현행 200만원)
- ② (신용기능 부여)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후불결제 기능 허용

- (금융인증) 생체정보인증, 분산신원확인(DID, Decentralized ID) 등 새롭게 나타나는 인증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
- 다양한 인증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인증 인프라 구축방안*도 검토

* 예) 생체정보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생체정보 분산관리 시스템 구축

금융안정 기반 고도화

-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외부기관 보관·예치 등 보호방안 도입

* 미상환잔액 추이(조원) : ('16) 1.0 → ('17) 1.4 → ('18) 1.3 → ('19上) 1.5

- 또한, 전자금융거래 복잡·다양화에 대응하여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등이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체계 마련

- (보안 강화) 금융과 ICT의 융합 현상* 등을 반영하여 금융보안 원칙을 정비하고 금융분야 사이버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 AI, 빅데이터 등 금융의 신기술 활용 증가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FinTech·Big Tech 등 새로운 플레이어를 수용하는 금융보안 원칙 필요

- 기존 규정 중심의 보안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정비하여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
- 증가하는 신기술 리스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역할을 확대·강화*

* 전자금융거래법상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정비

2 디지털금융의 기반기술을 수용한 규제체계 마련

- **(클라우드)**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권 확립 등 금융 클라우드 안정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지원
 - 주요 전자금융 보조업자(3rd Party)인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체계 확립을 통해 IT아웃소싱 리스크 관리 강화
 - 금융회사 등의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가이드(안전성 평가 안내서)를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에 예산지원 추진*
- * 금융 클라우드 이용 보조금 지원 추진('20년 예산안)
- **(금융플랫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개선* 추진
 - * 예) 1사 전속규제, 금융상품 모집 겸영제한, 설명의무 등
 -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금융(관련)업으로 제도화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비자보호 등 강화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 지원 및 감독 효율화

- **(Reg-tech 고도화)** 금융회사 보안수준, 규제준수 현황을 자동 점검·분석하는 금융보안 레그테크 고도화로 자율보안역량 강화
 - * 레그테크를 통해 보안규제 준수 자체점검 등에 활용중(344개 금융회사 등)
 - 금융보안 레그테크(금융보안원)에 AI기술 적용('20년 시범사업) 및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활용범위 확대* 추진
 - * 국내외 금융권 레그테크 적용분야, 활용 동향 등 연구('20년, 금융보안원)
- **(Sup-tech 혁신)** 금융감독체계에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셉테크(Sup-tech) 도입
 - 머신러닝 등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기능을 강화한 지능형 자금세탁방지 정보분석 지원시스템 구축('21.1분기, FIU)

◇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금융혁신이 가능하도록 금융결제·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정비 지속 추진

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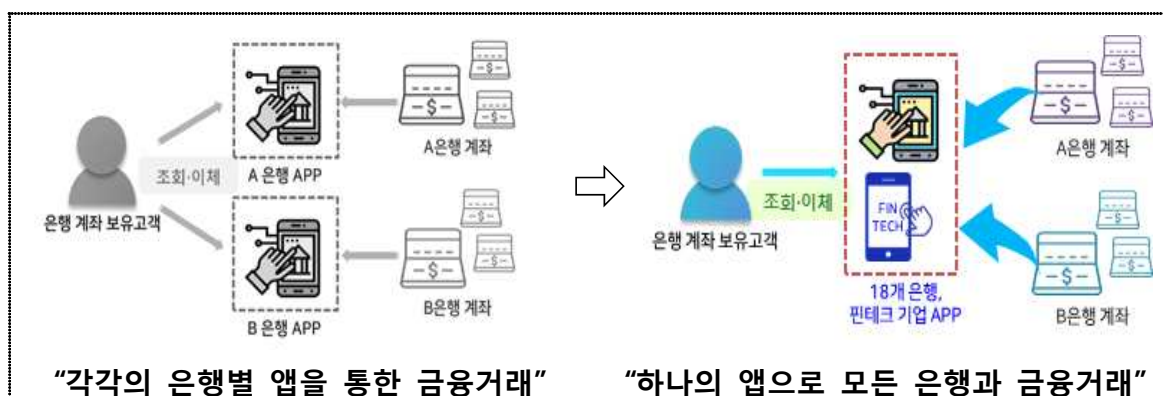
- 디지털 금융혁신기반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더불어 금융결제·데이터·인증 등 금융인프라 구축·확대 노력을 지속할 필요
- AI, 플랫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도 금융혁신의 중요한 과제

나. 추진과제

①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오픈뱅킹)은 차질없이 추진

- 시범운영을 토대로 시스템 안정성·보안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에 만전 ⇨ 12.18일 본격실시 예정
 - 금융산업 혁신과 더불어, 하나의 앱을 통한 금융거래와 지출·자산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다변화로 소비자 금융편리성 제고
 - 향후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 연계, 제2금융권 참가 등 “금융결제 혁신”의 범위와 수준 확장(Open Banking → Open Finance)

< 오픈뱅킹 도입의 기대효과 >



2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인프라제도 정비

□ (신용정보법 개정)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등 데이터 활용의 법적기반 마련 추진(법사위 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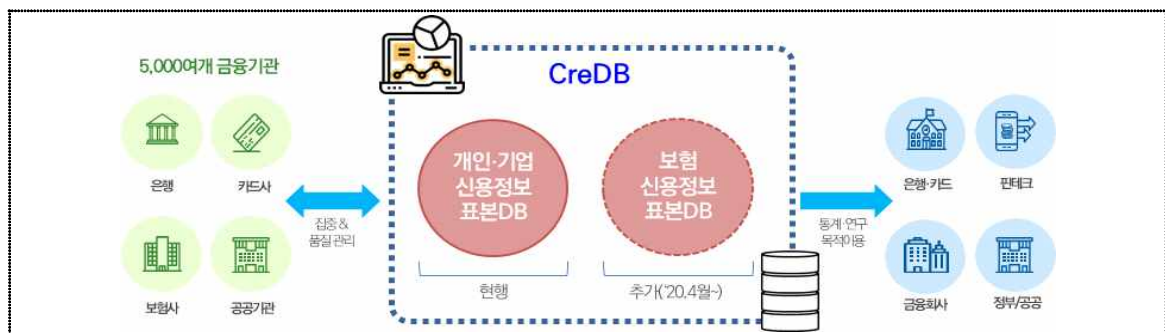
-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더불어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및 정보수집 절차의 안전성·보안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

□ (인프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고도화

①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CreDB 범위 확대(⇒ 보험 신용DB 추가)

-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은 저비용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사업·서비스에 활용(예. 가구 생애주기별 대출 특성)

<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신용정보원, '19.6월부터 운영) >



② [데이터 거래소] 비식별·기업정보 등의 집중·거래 시스템 마련

-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통해 異種산업간 활발한 데이터 거래를 유도하고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출현 촉진

<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금융보안원) 기대효과 >



③ [데이터 전문기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결합*·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기관'(신정원, 금보원 등) 도입

*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동일인에 대한 데이터를 상호 연결하여 활용

-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 금융과 유통·통신 등 他산업간 데이터 결합, 비식별조치 등의 안전한 처리기반 마련

< 데이터 전문기관 활용 사례: 공공정보 + 카드매출정보 → 상권분석 서비스 >



□ (신규 Player 출현 유도)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에 다양하고 새로운 CB사 및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 촉진(신정법 법사위 계류)

- 특화 CB사* 도입을 위해 신용조회업을 세분화(개인CB, 기업CB, 개인사업자CB)하고, CB·카드사에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을 허용

* 예) 비금융정보 전문 CB사 : 통신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 ⇨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Thin-filer)의 금융이용 가능성 확대

- My Data 업무(본인 신용정보 관리업)를 신설하고 고객 신용·자산 관리에 필요한 부수·검정업무 허용 및 진입장벽(자본금 등) 완화

< My Data 서비스 도입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효과 >



3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

- **(P2P금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에 따라 산업발전과 이용자보호가 균형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 마련

- P2P금융을 중금리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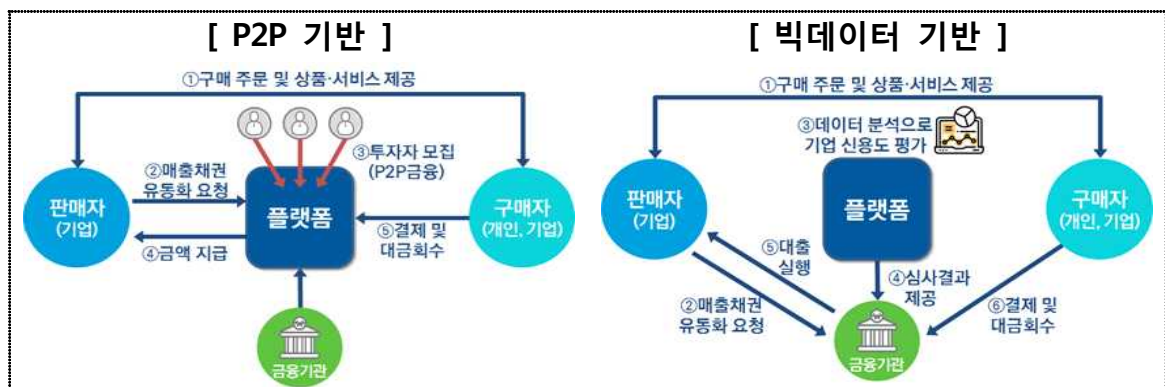
* 추진 일정(잠정) : ('20.1월중) 하위법령 입법예고, 부처협의 → ('20.4월중)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 ('20.6월) 하위법령 공포 → ('20.8월) 법시행

- **(플랫폼 매출망 금융)** P2P·빅데이터를 통해 운전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비용부담 완화

* **플랫폼 매출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 : 물품 등을 생산·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을 '공급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

-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소상공인에 대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개선 추진

< 플랫폼 매출망 금융의 주요 형태 >



- **(금융분야 AI)** 금융분야를 인공지능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권 AI 산업 육성 지원

- 가이드라인 등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금융권의 신속한 인공지능 수용 및 AI 서비스 투자·개발 활성화 촉진

- **AI 알고리즘 모형, 학습데이터**(차별적인 정보반영 등) 등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

※ 참고 : EU 집행위원회, AI 서비스 개발 원칙 등 AI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19.4)

◇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맞춤형 자금이 공급되고 원활하게 회수되는 자금조달·순환체계 마련

가. 필요성

□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출현을 위해 혁신적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원활하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 환경이 필요

○ 또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의 확대*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회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도 중요

*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19.3월), 금융회사 출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벤처·창투조합의 핀테크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VC에서 핀테크 전담인력·조직 확충

나. 추진과제

①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투자기반 확장

핀테크 랩 등 보육인프라 및 핀테크 특화 IR 확대

□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보육(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으로 핀테크 업계의 원활한 창업 지원 및 사업안착 유도

○ 핀테크 랩, 디캠프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속 발굴하고, Front1(마포혁신타운), 신보 Nest 등에 핀테크 부문* 별도 마련

* 민간 AC와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연간 200개)에 연 10개 핀테크 기업 선발

□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기회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핀테크 스페셜라운드(반기 1회), 디캠프 핀테크 데모데이(반기 1회), 신보** (반기 1회) 등 신설·정례화

* '16.8월 출범 이후 180개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에서 약 1조원 투자유치

** '19.7월부터 운영 중인 민간투자유치 플랫폼(U-CONNECT)에 핀테크 분야 신설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권의 혁신기반 마련

- 금융회사가 투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 확대* 등 금융권의 핀테크 출자·내부화를 통한 금융-핀테크 협업 고도화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19.10월 시행)

- 금융회사 핀테크 랩 및 금융그룹의 핀테크 스타트업 직·간접 투자 및 금융-핀테크 협업 등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

* ① 핀테크 랩의 핀테크 기업 투자추이(억원): ('16) 53, ('17) 121, ('18) 252, ('19上) 206

② 삼성금융은 11월중 12개 핀테크 스타트업 선발협업 및 그룹펀드(900억원) 투자 예정

- 핀테크 혁신펀드, 핀테크 랩과 연계한 투자정보 플랫폼* 도입
⇒ 핀테크 업계와 투자자 DB 구축 및 정보부족 해소



②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 조성(4년간 3,000억원) 등 투자자원 확대

-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운영 ⇒ 핀테크 투자의 마중물

* 은행 등 금융권 1,500억원 + 민간출자 1,500억원 → 3,000억원

- ① [성장단계별 투자]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 및 본격적인 해외진출 투자로 구분(1,500억원씩)

- ② [운용사] 핀테크 전문운용인력·전담조직 보유여부 등을 선정 심사에 반영하고, 운용사 인센티브*(성과보수 우대 등) 운영

* 핀테크 랩 기업, 샌드박스 승인기업, 해외진출 기업에 펀드자산의 일정부분 이상을 투자하는 운용사에 성장금융의 초과수익 제공

- ③ [운용규모] 자금운용 추이, 시장수요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재원추가 및 펀드규모 확대(4년간 3,000억원 → 6년간 5,000억원)

□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보증·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핀테크 업계에 대한 시장의 자금공급 부족을 보완(3년간 3.35조원)

- ① [신보] 핀테크 랩·핀테크 혁신펀드 투자 연계보증*(100억원) 등 보증공급 확대('19년 500억원 → '22년 1,200억원, '20~'22년 0.3조원)

* 「핀테크 레벨업 보증」: 핀테크 랩 추천기업,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기업에 보증 제공

- ② [기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향후 3년간('20~'22) 500억원 규모의 직·간접투자자와 최대 3조원 수준의 저리대출자금 공급

- ③ [산은]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핀테크 분야'를 추가하여 혁신모험펀드(3년간 10조원) 등 혁신성장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 유도

* 산은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이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시 기업선정에 활용

③ 핀테크 IPO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 상장제도 보완

□ 핀테크 기업 IPO 성공사례의 창출·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등 일부 조정 등 핀테크 친화적 상장환경 조성

- ① [상장심사 우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기술특례상장심사시 기술평가(전문평가기관) 및 질적심사(거래소)에서 우대적용

< 기술평가 우대사항 >		< 질적심사 우대사항 >	
심사항목	중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중점 심사사항
사업성 → 우대	▶ 시장매력도	혁신성 → 우대	▶ 정부의 혁신성 인정여부 등
	▶ 사업모델 타당성 및 경쟁우위도	기술성	▶ 사업 독창성 및 혁신성 등
자원 인프라	▶ 사업경쟁력	성장성	▶ 주력 기술의 실현가능성
	▶ 경영역량		▶ 기술력 지속유지 가능성
	▶ 개발역량		▶ 연관 4차 산업의 성장 및 확장 가능성 등

- ② [핀테크 전문평가기관] 핀테크 업종에 대한 원활한 기술평가를 위해 산업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전문평가기관에 추가*

* IT 전문 연구기관 우선 추가 → 금융 전문성 보유 금융유관기관(금융보안원 등) 추가

- ③ [상장유치] 핀테크 랩 등과 연계하여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상장제도 홍보 및 상장유치 활동 강화

◇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거점을 중심으로, '시장정보 - 공간 - 네트워크 - 투자연계' 등을 제공

가. 현황 및 문제점

□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국내에서 충분한 고객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외진출에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지원체계는 미비

* 총 26개의 핀테크 기업이 14개국에 진출 중이며, 25개사 이상이 해외 진출 희망(핀테크지원센터 자체 조사, '19.5월)

○ 잠재력 높은 아세안 국가* 등에 진출수요가 있으나, 경험과 정보 부족에 따른 네트워크, 시장조사역량 부재 등 어려움 호소

* 아세안 지역의 모바일 및 인터넷 사용자수는 각각 전세계 3위, 4위인 반면, 평균 계좌보유율은 50% 수준으로 핀테크 활성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 아세안 국가와의 금융인프라 협력사업 등 신남방정책도 핀테크 기업의 동반진출 기회로 활용 가능

나. 추진과제

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정부'간 3자 협업체계 활용

□ '20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하여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진출 추진

○ 금융회사는 현지·글로벌 AC와 연계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에 공간,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현지 네트워크 공유

○ 해외 핀테크 랩에 현지 스타트업도 입주시켜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과 협업관계 등 시너지 모색

*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의 경우 현지 스타트업 11개사 발굴·육성

- 핀테크 랩의 해외 개소*와 연계하여 민간중심의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분위기 확산 지원

* (사례)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16.12월) → 신한 퓨처스랩 인도네시아('19.9월)
→ 우리 디노랩 베트남 개소('19.10월)

- 핀테크 랩 진출시 핀테크 IR 등을 개최하여, 핀테크 스타트업 해외투자 유치 및 홍보기회 마련

* (사례)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데모데이 in 인도네시아('19.9월), 핀테크 데모데이 in 베트남('19.10월), [산은] NextRound in 인도네시아('19.9월)

- 개별국가와 상호간 핀테크 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간 레퍼럴 메커니즘 확대(현재, 베트남·영국·싱가폴·프랑스와 MOU 체결)

- 핀테크 시장 트렌드, 규제, 제도운영 경험(샌드박스, 오픈뱅킹 등), 지원 프로그램 등 금융혁신 관련 정보 및 정책 공유

②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핀테크 분야 금융협력

- 신남방국가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해외 금융인프라 현대화 사업 참여와 연계*하여 핀테크 기업의 진출 모색

* 특정 국가에 국내와 동일·유사한 금융인프라가 확보될 경우, 국내 핀테크 기업의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는 측면

※ [참고] 금융인프라 유관기관(금융결제원)의 국제협력 동향

- ▶ 금융결제원은 KSP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가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 관련 컨설팅 및 구축사업에 참여 중(캄보디아, 이집트, 스리랑카, 아르메니아)

- 아세안 금융협력센터('20년 개소, 인니)와도 핀테크 국제협력 추진

- 싱가포르 등 신남방국가 소재 산업은행 해외지점에 (가칭)“코리아 스타트업 데스크” 신설

- 주요국 핀테크 산업동향, 현지 금융회사·투자자·AC·스타트업 네트워크 등을 핀테크 등 스타트업과 공유

3 공공부문의 지원체계 마련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 운영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의 실증기회*를 부여하여 국내외 핀테크 기업 상호진출의 관문으로 활용

* 해외진출시 현지 기업·투자자 등이 국내 시장출시·운영경험(Track record) 요구

- 해외진출 추진 중인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국내진출(국내법인)을 원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샌드박스* 운영

* 해외진출 서비스 우선심사, 제한된 테스트 범위 등을 통해 신속한 테스트 완료

- 필요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사실 및 운영실적 등 확인서 발급

핀테크 박람회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코리아 핀테크워크 규모를 확대*하여 핀테크 기업·투자자 등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고, 핀테크에 대한 민간의 관심도 제고

* '20.5.28~30 개최예정(잠정), 참여기업 대폭 확대('19년 50개 → '20년 150개 기업)

- 국제 핀테크협력을 모색하는 한-아세안 핀테크 컨퍼런스 개최(12.16)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마련

- 경험이 부족한 핀테크 기업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정보·전략 제공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핀테크지원센터)

- 핀테크 종합포털(fintechportal.or.kr) 내 '해외진출' 메뉴를 신설하여, 주요국 핀테크 산업·정책 동향* 및 네트워크 정보 게재

* 매년 「아세안 지역 핀테크 산업동향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개

- 법률·특허·회계분야 전문기관과 매칭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개별 기업의 목표·전략에 따른 맞춤형 교육·멘토링 운영

* ('19년 예산) 해외진출컨설팅 6.8억, 맞춤형 교육 4.2억, 멘토링 2.74억 등

◇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예산·세제지원 확대 및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 강화 추진

가. 필요성

-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에 예산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및 수행역량 제고

나. 추진과제

① '19년 재정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20년 사업확대

- 핀테크 기업 테스트비용, 보안강화 지원예산 등 '19년 핀테크 예산집행(101억원)을 차질없이 마무리
- '20년에는 재정사업 범위·규모 확대 추진(→ '20년 예산안 198억원)
 - [신규사업]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금융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신기술 개발 지원
 - [기존사업] 규제 샌드박스 본격운영에 맞춰 테스트베드 운영 예산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관련예산도 증액(박람회, 해외조사 등)

② 핀테크 지원센터의 사업역량 강화

- 핀테크 예산사업 확대에 맞춰 예산집행기관(핀테크지원센터) 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운영 내실화 추진
 - [조직] 상근임원 도입 및 사업부서를 확대하고 예산집행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신설
 - [사원기관] 현행 사원기관(12개)에 금융유관기관 추가*·외연확대

* 예) 신용정보원, 한국증권금융, 핀테크산업협회, 저축은행중앙회, P2P협회 등

3 핀테크 친화적 세제체계 도입

-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함께 일반기업과 금융회사의 이중적 지위에 따른 과세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 부여

* 일반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과세혜택이 핀테크 스타트업에는 금융업이라는 이유로 배제

핀테크 창업 촉진

- (현행)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개인사업자)·법인세를 감면* 중이나, 핀테크 기업(금융업으로 분류)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100%

- (개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 포함 추진

※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조특법 개정안 既 발의('19년 정부 세법개정안)

- 감면 대상 추가업종의 세부 사항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 예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 (현행) 그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법적근거가 없어 온라인 투자연계금융 투자자 소득에 불리한 과세제도 적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소득) 25% vs. (펀드투자 배당소득·일반예금 이자소득) 14%

- (개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시행에 맞춰 투자자에 예금자·펀드 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19.11.2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공포 → '20.8.27. 시행 예정

- 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를 통해 투자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4% 적용

*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시행일 이전 투자에 따른 소득도 포함)

IV. 추진체계 및 향후일정

1. 추진체계

-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민관 협의체 구성
 - **(규제개혁)** 10.15일, 지급결제·금융투자·보험·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 운영 착수
 - **(투자확대)** 세부과제 조율·이행 및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금융회사·성장금융·유관기관 등 「핀테크 투자협의회」 구성·운영
 - **(해외진출)** 민관합동 「글로벌 핀테크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기관간 정보공유·해외IR·네트워크 등 지원체계 구축

*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랩, D.camp, KOTRA 등 참여(해외금융협의회와 연계)

2. 향후일정

- ①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혁신성장전략회의 상정 및 발표와 연계하여 주요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
 -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 핀테크 혁신펀드 출범 → 「디지털 지급결제 및 금융보안 종합방안」
 - '20.3월,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 논의결과 발표
-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신용정보법(개정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및 후속조치 준비
- ③ 스케일업 전략 핵심과제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 마련
 - 디지털 지급결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

3. 세부 핵심과제별 추진일정

분 야	핵심과제	시기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❶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3월) 등 과감한 운영	계속
	❷ 내실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제도보완	'19.4분기
	❸ 핀테크 기업의 연착륙을 위한 사후지원·감독방안 마련	'19.4분기
②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	❶ 금융규제 샌드박스와의 연계한 동태적 규제혁신	계속
	❷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도입을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20.上
	❸ 현장과 함께하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계속
③ 진입장벽 완화	❶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적용	'20.上
	❷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 도입	'20.上
	❸ 개별 금융업법에서 특화 인·허가(등록) 신설 및 세분화	계속
④ 디지털금융 규율체계	❶ 디지털금융 규율체계 선진화를 통한 혁신과 안정의 균형	'20.上
	❷ 디지털금융의 기반기술을 수용한 규제체계 마련	'20년
	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 및 감독 효율화	'21년
⑤ 디지털 금융 혁신기반 확충	❶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은 차질없이 추진	'19.4분기
	❷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인프라 정비	'20년
	❸ 핀테크에 기반한 신규 금융서비스 활성화	'19.4분기
⑥ 핀테크 투자 활성화	❶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투자기반 확충	계속
	❷ 핀테크 혁신펀드 등 투자저변 확대	계속
	❸ 핀테크 IPO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 상장제도 보완	'19.4분기
⑦ 해외진출 지원	❶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정부'간 3자 협업체계 활용	계속
	❷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핀테크 분야 금융협력	계속
	❸ 공공부문의 지원체계 마련	'20년
⑧ 핀테크 지원 고도화	❶ '19년 재정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20년 사업확대	'20년
	❷ 핀테크 지원센터 사업역량 강화	'20년
	❸ 핀테크 친화적 세제체계 도입 추진	'20년